

노동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pp. 43-73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가능성: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주의적 전통의 복원

은수미*

이 글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혹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이 ① 공공성의 확보와 ② 연대성의 제고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와 같은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사회운동적 조합주의가 가지고 있던 건강한 문제의식을 되살리고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넘어설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 이 글에서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연결망 분석이다. 민주노총 중심의 전국적 노동운동을 대상으로 1991년과 2001년에 한정하여 연결망 비교분석을 수행하며 또 연결망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운동 문헌조사를 통한 담론분석을 부분적으로 시도한다.

분석 결과 공공성과 통합성의 모든 면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조건은 상당히 와해되어 왔지만 여전히 전국적 차원에서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어 있는 한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관계 맺기가 정규직 중심의 과당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으로부터 개혁적 리더십으로의 이행, 강력한 산별 전환, 그리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공공성, 통합성, 연대주의, 연결망분석

투고일 : 2005년 1월 17일, 심사의뢰일 : 2월 4일, 심사완료일 : 2월 18일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esumi@kli.re.kr)

I. 머리말

사회운동적 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임금불평등의 심화, 실업 확산, 비정규직의 확대 및 새로운 빈곤에 대한 무능력을 드러낸 전 세계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또 한국과 아시아 등지의 노동운동은 남아공 COSATU나 브라질의 CUT와도 다른 ‘새로운’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었다. 왜냐하면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높은 성차별주의와 기업별 노조 때문에 남아공이나 브라질과 달리, 작업장이 아닌 거리와 지역에서 노동자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Moody, 1997). 최근에는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의 보다 완화된 표현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정립한다는 것은 곧 복지운동, 정치운동, 지역운동으로서 노조운동이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위치 짓는 것”이며 “하청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작업”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인 예이다(김동춘, 2002).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뒤늦은 성장, 때이른 침체(임현진·김병국, 1991: 113)’가 거론되고 특히 ‘사회적 고립(김동춘, 1995)’과 ‘정규직 이기주의(박태주, 2001: 40)’ 등의 제 문제가 강도 높게 검토되면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혹은 노조주의)은 일회적 문제제기에 멈춰버렸다.

이 글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필요충분조건이 ① 공공성의 확보와 ② 연대성의 제고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와 같은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 이를 통해 사회운동적 조합주의가 가지고 있던 건강한 문제의식을 되살리고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넘어설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사실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는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의 핵심적 요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동자(worker)와 공동체(community) 간의 연계이다(Naidoo, 2001).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화의 대상을 전통적인 노동계급을 넘어서서 비

정규노동자, 실업자, 여성 및 일부 중간계층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또한 “제도화된 단체협상의 관행을 사회운동과 연관된 집합행동 양식과 결합하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Woody, 2002: 30). 사회운동적 조합주의가 조직 내 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위 순수하고 단순한 노조주의(servicing unionism)와 구별되는 광범위한 조직화에 주목하는 노조주의(organizing unionism)로 지칭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합의 목표 및 의제를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문제들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와 관련된 문제들로 확대하여 시민사회적 의제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대성’과 ‘공공성’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화의 대상과 범위를 중간계층의 일부로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는 ‘신’사회운동의 전통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CUT와 COSATU의 지도부와 활동가들 및 거주 지역에 기반한 조직체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를 계급에 근거한 운동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한다. 또 노동계급의 주요한 동맹세력 중의 하나인 “새로운 거주지역이나 여성들의 조직들은 그들 나라에서 비계급적인 ‘신’사회운동으로서 출현한 것이 결코 아니다(Moody, 1997)”. “사실상 포스트모던론자의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공장과 지역,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운동들은 모두 지난 2, 30년 동안 제3세계에서 집중된 산업화, 도시화 및 계급형성의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Moody, 1997: 343~344)”. 따라서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급진적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노동계급의 새로운 부분들 혹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계급들로 그 연대의 폭을 확장하여 사회적 양극화에 저항하는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때문에 관료화된 기존의 노동자정당들에 대해 비판적이며 동시에 기존의 노조주의적 전통에도 비판적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급진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연대의 폭을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상충적이다. 유럽의 경우 “사회당들은 자신의 사회주의 목표를 포기하고 난(탈급진화 된-필자) 이후에야 노동자계급 이외의 집단들의 지지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지지층을 확대하려 한다면 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목표

—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획득하려는 —
 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 다른 계급의 구성원
 들과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으로 약속해야 한다
 (Przeworski, 1985)”. 따라서 공공성과 연대성을 유지한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노동계급의 급진적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검토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노동계급의 ‘급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
 는 상황에서 이 글은 노동계급이 비정규직 및 여성, 실업자 등 노동 내부와의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적 의제
 를 가지고 시민사회의 여타 세력과 연대하는 것은 변화된 조건에서 새롭게 구
 현되어야 할 급진성의 일부라고 강조한다. 또 조직 내부의 이해에 주목하는 ‘노
 동조합’ 운동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극복하고 노동의 보다 많은 부분들을 조직하
 며 시민사회적 의제를 형성해가는 ‘노동운동’으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노
 동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라는 것에 주목한다(김동춘, 2002:
 160~164).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 노동운동이 그 형성 초기에 이미 사회운동적 성격
 을 담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노동계급이 전 인구의 30%를 넘어섰
 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결성조차 가로막힌 ‘시장배제적’인 국가 억압(송
 호근, 1991)의 조건은 노동운동에게 작업장을 넘어서는 활동을 요구하였다. 예
 를 들어,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성장하는 통일성은 작업장에 근
 거를 둔 것일 수 없었다(Moody, 1997: 350)”. 19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 당
 시 “거리에서부터 계급적 통일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남성이 지배적인 중공업 노조연맹과 여성들이 대다수인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
 조연맹의 통합으로 나아갔다(Moody, 1997: 352)”.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가 기업별 노조체계를 뛰어넘는 지역별 연합의 성격을 띤 것도 이와 같
 은 전통의 일부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으로의 제도화의 과정에서 사회운동적 전통은 점차 사라지
 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공장의 남성 정규직 노동조합들은 경제위기를 전후
 하여 임금인상 및 기업복지 등 조합원들의 이해의 독점적으로 대변에 주력하였

다. 이것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노동운동의 규모와 밀도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한편, 노동운동의 연대주의적 전통의 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은 1980년대 노동운동의 특성을 복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가늠해보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II. 연구가설과 접근방법

이 글에서는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이 약화 혹은 강화되어 온 정도 및 추세를 ‘공공성’과 ‘통합성’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첫째, ‘공공성’ 가정: 조직노동자들 혹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점적 이해를 넘어서는 노동 전체의 집단적 이해의 형성이나 여타 시민사회적 혹은 민주주의적 의제의 형성 및 이를 위한 행위가 강화될수록 노동운동은 보다 사회운동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가정한다 1). 특히 사회적 배제에 대한 반대나 대안적 의제의 형성을 가장 공공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규정한다. 둘째, ‘통합성’의 가정: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들 간의 상호관계, 또 이들 노동조직들과 시민운동조직들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관계에서 파당이나 분화가 적을수록 노동운동은 보다 사회운동적 성격을 띤다. 특히 참여연대와 같은 상대적으로 친노동적 시민조직과의 결속이 강할수록 또한 이 결속이 시민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심적일수록 노동 외부의 통합성은 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공공성과 통합성이 높을수록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적 특징, 특히 연대주의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연대(주의)는 “공동행동과 상호의존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적인 이상과 신념 및 제도화의 총체”이기 때문이다(은수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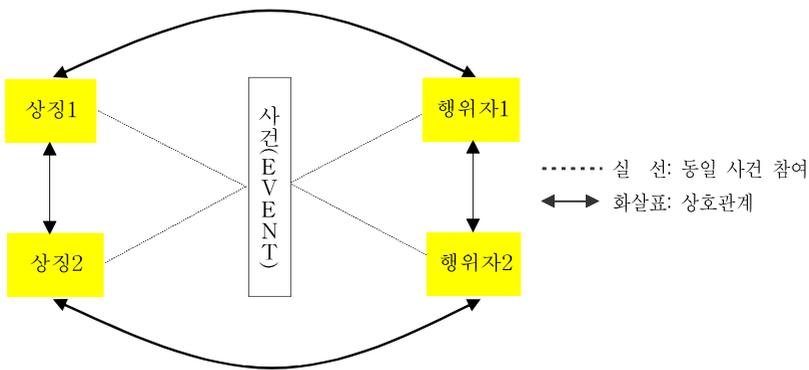
다음으로 이 글의 주요 접근방법은 연결망 분석이며 여기에 담론분석을 결합하여 연결망 분석의 한계를 보완한다²⁾. 우선 연결망 분석부터 살펴보면 이 글

1) 공공성에 대한 성격 규정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WTO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공공성을 좁게 해석하는 견해(오건호, 2004)에서부터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규명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에서 채택하는 연결망 접근은 쌍대성(duality, Breiger, 1974; Burt, 1992; 김우식, 2001)의 원리에 기초한 ‘관계와 상징의 복합적 연결망’이다(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2004). ‘관계와 상징의 복합적 연결망’ 접근이란 ① 하나의 행위와 다른 하나의 행위의 직접적이고 단일한 결합에 기초한 ‘일차원적 연결망’이나 일차원적 연결망의 중첩을 다루는 ‘다차원적 연결망’ 접근과 달리, 행위 연결망과 상징 연결망을 결합시키는 복합적 연결망을 의미한다. 때문에 상징 즉 노동의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의 형성과 연대주의적 행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질적인 자료, 예를 들어 역사적 경험이나 인터뷰 자료 혹은 문헌 자료들을 양화하는 것이다. ③ 사회적 의제로서 상징과, (행위)관계의 구조를 결합하여 상징의 행위자적 맥락 혹은 행위자의 상징적 맥락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맥락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접근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특정 시기의 연합사건³⁾을 중심으로 동일 사건에 참여한 행위자(조직)와 행위자(조직)의 상호관계, 상징과 상징의 상호관계, 행위자와 상징의 상호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연결망 분석

(그림 1) 관계와 상징의 복합적 연결망



- 2) 연결망 분석은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해석과 인과적 분석에서 취약함이 있다. 때문에 이것을 담론분석을 결합시켜 보완시키려는 것이다.
- 3) 여기서 연합사건은 2개 이상의 조직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건을 의미하며, 크게 3종류로 구성된다. 첫째, 노동조직들만이 참여하는 연합사건, 둘째, 노동조직과 시민조직들이 참여한 연합사건, 셋째, 시민조직들만이 참여하는 연합사건 등이 그것이다. 또 연합사건의 유형은 연합조직의 결성에서부터 공동성명서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강도는 크게 강한 연계, 중위 연계, 약한 연계의 등의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

기법은 ① 파당(clique, n-clique) 분석, ②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분석, ③ 블록 모델 분석 등이다. 파당 분석은 하위 분파의 형성 유무 및 이들 하위 분파 간의 연계 강도를 측정하여 연결망의 통합과 분화 정도를 확인하는 분석기법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통합성 여부를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 구조적 등위성은 동일한 지위에 대한 측정이라는 점에서 특정 상징군과 특정 행위군이 연결망에서 어떤 위치(지위)를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의 '독점적 이해'에 주목하는 상징과 노동자 전체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상징 간의 위치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블록 모델 분석은 특정 집단의 형성, 이들의 상호관계 또 이 집단 전체의 연결망 위치를 드러낼 수 있다. 더불어 연합사건을 중심으로 연결망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은 연합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들을 당연히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들은 대개의 경우 영향력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헌 자료에 대한 간접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거나 보완가능한 문제이다.

두 번째로 담론(언술) 분석은 언술 혹은 담론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접근방법을 두 가지로 차별화할 수 있다. 담론을 언어적인 '표현'으로만 본다면 담론 분석은 진리를 구성하는 언어규칙에 주목하는 일종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이나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만으로 충분할 것이다(이진우·박일우·김종환, 1996: 257~258). 그러나 20세기 사회철학에서의 '언어적 전환'이 갖는 함의를 받아들여, 담론을 사회 제 세력간의 힘 관계 속에서 실행되는 구체적인 '언어권력'이자 현실 '재현'으로 보면서 푸코(Foucault)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권력관계에 주목하거나 뻬쇠(Pêcheux)처럼 계급론적 담론 개념을 사용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단어들의 보편적 의미나 보편적 체계를 부정하게 된다. 낱말·표현·명제 등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론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론 분석은 담론을 구성하는 일련의 규칙을 분석함으로써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바뀐다(Macdonel, 1992: 35~58). 그 결과 분석방법 역시 발신자와 발화체 그리고 발화 행위의 관계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김종업, 1988). 이 글에서는 언

어적 표현으로서의 텍스트 분석과 사회역사적 맥락을 결합시키는 담론 분석 방식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주요 선언문에서 사용된 핵심적인 단어, 단어의 빈도수, 단어와 단어 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선언문이 발간된 사회·역사적 맥락에 주목하거나, 주요 논쟁의 내용 및 논쟁구조, 논쟁의 맥락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채택하는 텍스트는 시기별 대표 조직의 주요 문건이나 주요 사건 자료(예를 들어 민주노총 결성선언문,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록, 민주노총 사업보고,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주요 급진적 조직사건에서의 공판기록 등) 혹은 2차 문헌에서 그와 같은 중요성이 인정된 것, 또는 노동일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

Ⅲ. 연구대상 및 자료

이 글은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민주노총 중심 노동운동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연결망 분석은 1991년과 2001년의 두 해에 대한 비교로 한정한다. 또 자료는 문헌 자료, 연결망 자료를 사용하며 연결망 자료의 경우는 지역과 현장을 뺀 전국(중앙) 차원의 자료로만 주로 구성한다.

첫째, 문헌 자료는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뉘며, 1차 자료의 경우 ① 노동운동 및 시민운동·조직'들의 활동 자료와 ②기타자료로 다시 나뉜다. 대상이 된 조직 활동 자료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였던 조직들 중 연합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300여 개 조직의 자료이다. 특히 시기별 대표적인 노동조직 및 시민조직의 결성선언문, 주요 구성원, 목표(혹은 강령), 조직체계 및 규약, 연혁, 내부 회의록, 다양한 조직활동(대중집회, 시위, 투쟁조직결성, 공청회, 심포지엄, 정규·비정규 간행물,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및 정책관련 보고서 등) 자료, 발간·미발간 백서, 재판 자료 등을 활용한다. 또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 급진적 조직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전민련, 전국연합,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의 자료들은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는 10년간의 내부 운영회의 자료와 모든 성명서가, 전노협의 경우 전노협 백서가, 민주노총

〈표 1〉 1991년 상징연결망 자료

| 상징대 | 상징중 | 상징소 | 개수(%) | | |
|----------|------------|-----------|---------|----|----------|
| 1. 민주주의 | 1. 민중민주 | 1. 민중민주 | 4 | 4 | 19(32.2) |
| | | 2. 민주쟁취 | 5 | 11 | |
| | 2. 일반민주 | 3. 학문사상자유 | 3 | | |
| | | 4. 인권/탄압 | 3 | | |
| | 3. 정치적 합리화 | 5. 공명선거 | 3 | | |
| | | 6. 부패척결 | 1 | | |
| 2. 경제개혁 | 4. 경제적 합리화 | 7. 경제/자립 | 3 | 3 | 3(5.1) |
| 3. 사회개혁 | 5. 사회적 합리화 | 8. 환경 | 1 | 1 | 1(1.7) |
| 4. 통일/평화 | 6. 통일/평화 | 9. 통일 | 2 | 2 | 2(3.4) |
| 5. 소수자/성 | 7. 여성 | 10. 성폭력 등 | 3 | 3 | 7(11.8) |
| | | 11. 여성고용 | 1 | 4 | |
| | 8. 여성노동 | 12. 여성복지 | 3 | | |
| 6. 노동 | 9. 노동정치 | 13. 노동법 | 6 | 19 | 27(45.8) |
| | | 14. 노동탄압 | 11 | | |
| | | 15. 노동방향 | 2 | | |
| | 10. 노동조건 | 16. 임금 | 4 | 8 | |
| | | 17. 고용 | 1 | | |
| | | 18. 산재 | 3 | | |
| 총 합 | | | 59(100) | | |

〈표 2〉 1991년 연합사건 자료

| 번호 | 일시 | 사 건 명 | 참여조직 | 연계 |
|-----|------|---------------------------------|------|-----|
| 1 | 1991 | 고강경대열사폭력살인규탄과공안통치중식을위한범국민대책회의결성 | 생략 | 3 |
| 2 | 1991 | ILO조약비준및노동법개정을위한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 3 |
| 3 | 1991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결성 | | 3 |
| 4 | 1991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창립 | | 3 |
| 5 | 1991 | 산업보건종합센터추진대회 개최 | | 3 |
| 6 | 1991 | 살인폭력규탄과공안통치중식을위한천주교대책위원회 결성 | | 3 |
| 7 | 1991 | 원진레이온직업병사망사건대책위원회 결성 | | 3 |
| 8 | 1991 | 6.18장기수석방과후원을위한공동모임 결성 | | 3 |
| ... | ... | ... | | ... |
| 59 | 1991 | 전노협지원성명 | 1 | |

주: * 연계는 공동투쟁 혹은 연합조직 결성등의 강한 연계(3), 심포지엄·토론회 등의 중위 연계(2), 공동성명서 등의 약한 연계(1)로 구분.

〈표 3〉 1991년 연합사건 참여조직

| | 조직이름 | 약칭 | 참여사건 | 시기 | 성격 | 분야 |
|-----|--------------------------------|--------|-------------------------|-----|-----|-----|
| 1 | 가톨릭노동사목 | 노동사목 | 12, 19 | 3 | 3 | 5 |
| 2 | 가톨릭농민회 | 가농 | 15,16 | 3 | 3 | 1 |
| 3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건치 | 1,43 | 4 | 5 | 6 |
| 4 | 건강사회실현을위한 약사회 | 건약 | 1,5,9,20,43,53 | 4 | 5 | 6 |
| 5 | 경기남부노련 | 경기남부노련 | 15,17,18,27,39,40,42,55 | 4 | 2 | 1 |
| ... | ... | ... | ... | ... | ... | ... |
| 200 | ILO기본조약비준및노동법개정을위한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 ILO공대위 | 35,38,49 | 4 | 2 | 1 |

주: * 참여사건번호는 연합사건번호와 동일. 또 결성 시기는 1-한국전쟁 이전, 2-1950~70년, 3-1971~86년, 4-1987~92년, 7-모름으로 기호화. 성격은 1-전위전선노동조직, 2-노동조합, 3-노동단체, 4-농민·빈민등, 5-시민1(참여연대로 대표), 6-시민2(경실련으로 대표), 7-시민3(가장 보수적 조직), 8-통일전선조직으로 기호화. 분야는 1-생존권(계급), 2-정치정당, 3-종합(준정당), 4-제도개혁, 5-인권종교통일, 6-사회복지의료, 7-여성소비, 8-환경교통주택, 9-교육학술학생, 10-문화언론정보, 11-기타.

** 시민1, 2, 3의 구분의 시민운동의 목표와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시민1은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시민조직으로 상대적으로 친노동적인 성격을 갖음. 시민2는 경실련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시민조직으로 노동과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둠. 시민3은 새마을운동본부 등 보수적인 시민조직을 의미함.

은 사업보고서 및 성명서, 기관지 <노동과 세계>, 각종 정책자료 및 조사자료 등이 대상이 되었다. 기타 자료는 행정부 및 사법부와 경찰·안기부 등 소위 공안기관의 발간자료, 신문 및 인터넷 등의 미디어 자료, 주요 논쟁자료, 개인들의 수기 및 시와 소설 등의 문학작품들이다.

둘째, 연결망 자료는 1차 자료 중 참여조직과 이슈(상징)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앙수준의 질적 자료들을 선택하여 연결망 분석이 가능하도록 양화한 것이다. ① 참여조직과 이슈가 분명히 나타나는 1991년과 2001년의 ‘연합사건 목록’과, 연합사건에 참여한 조직들의 ‘조직-사건’ 자료, ② 또 이슈만을 별도로 재구성한 상징 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연결망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2001년 상징연결망 자료

| 상징대분류 | 상징중분류 | 상징소분류 | 개 수(%) | | |
|--------------|------------|----------|---------|----------|---------|
| 1. 민주주의 | 1. 민주주의 | 1.민중민주주의 | 2 | 3(4.4) | |
| | | 2.자유민주주의 | 1 | | |
| | 2. 정치적 합리화 | 3.정치개혁 | 6 | 10(14.5) | |
| | | 4.인권 | 4 | | |
| 2. 사회개혁 | 3. 사회적 합리화 | 5.교육개혁 | 4 | 16(23.2) | |
| | | 6.환경/개발 | 4 | | |
| | | 7.의료개혁 | 6 | | |
| | | 8.서민생활 | 2 | | |
| 3. 경제개혁 | 4. 경제적 합리화 | 9.실업 | 1 | 5(7.3) | |
| | | 10.조세 | 1 | | |
| | | 11.재벌개혁 | 1 | | |
| | | 12.신자유주의 | 2 | | |
| 4. 소수자/여성/복지 | 5. 소수자/복지 | 13.사회권 | 2 | 11(5.9) | |
| | | 14.복지 | 2 | | |
| | | 15.최저임금 | 3 | | |
| | | 16.비정규 | 4 | | |
| | 6. 여 성 | 17.여성노동 | 17.여성노동 | 2 | 7(10.1) |
| | | | 18.성폭력 | 2 | |
| | | | 19.육아보육 | 1 | |
| | | | 20.여성인권 | 1 | |
| 21.성매매 | 21.성매매 | 1 | | | |
| | | | | | |
| 5. 통 일 | 7. 평화통일 | 22.통일 | 2 | 7(10.1) | |
| | | 23.평화 | 5 | | |
| 6. 노 동 | 8. 노 동 | 24.노동탄압 | 4 | 10(14.5) | |
| | | 25.노동권 | 2 | | |
| | | 26.노동법 | 2 | | |
| | | 27.노동조건 | 2 | | |
| 총 합 | | | 69 | | |

〈표 5〉 2001년 연합사건

| | 사 건 이 름 | 참여 조직 | 연계 |
|-----|---------------------------------------|----------|-----|
| 1 | 2001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결성 | 생략 | 3 |
| 2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 3 |
| 3 |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통일연대 준비위집행위원회 | | 3 |
| 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결성 | | 3 |
| 5 | 부당한 보험료인상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위한 노동시민단체공동대책위원회 | | 3 |
| ... | ... | | ... |
| 69 | 성명서-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시민사회노동단체참여자입장 | | 1 |

〈표 6〉 2001년 연합사건 참여조직

| | 조직이름 | 약칭 | 참여사건 | 시기 | 성격 | 분야 |
|-----|------------------|------|------------------|-----|-----|-----|
| 1 | 21세기생협연대 | 21생협 | 5,38 | 6 | 5 | 8 |
| 2 | 6월광장 | 6월광장 | 15,16 | 6 | 5 | 9 |
| 3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 노동사목 | 2,12,16 | 3 | 5 | 2 |
| 4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건보단 | 107 | 8 | 3 | 5 |
| 5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약 | 73,74,75,107,156 | 4 | 3 | 5 |
| ... | ... | ... | ... | ... | ... | ... |
| 277 | YWCA지역2 | Y지역2 | 59 | 0 | 4 | 10 |

주: * 참여사건번호는 연합사건번호와 동일. 또 결성시기는 1-한국전쟁 이전, 2-1950~70년, 3-1971~86년, 4-1987~92년, 5-1993~97년, 6-1998~현재, 7-모름으로 기호화. 성격은 1-전위선진노동조직, 2-노동조합, 3-노동단체, 4-농민·빈민등, 5-시민1(참여연대로 대표), 6-시민2(경실련으로 대표), 7-시민3(가장 보수적조직), 8-통일진선조직으로 기호화. 분야는 1-생존권(개급), 2-인권종교, 3-통일 4-의료사회복지, 5-종합시민, 6-교육학생학술, 7-문화언론정보, 8-환경교통주택, 9-정치법경제개혁, 10-여성소비, 11-기타.

IV. 공공성과 통합성을 중심으로 본 한국노동운동의 변화

1. 대의명분으로 전락한 ‘공공성’: 중앙-지역 현장 간의 심각한 괴리

1991년과 2001년에 형성된 사회적 의제들을 중심으로 한 앞의 상징연결망 자료(표 1, 표 4)를 비교해 보면 의제의 성격, 내용, 의제 상호간의 관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표 7〉 1991년-2001년, 상징분포 비교

| 상징유형 | 1991 | 2001 |
|-----------|----------|----------|
| 민주주의 | 15(25.4) | 3 (4.3) |
| 정치적 합리화 | 4(6.8) | 10(14.5) |
| 사회적 합리화 | 1(1.7) | 16(23.2) |
| 경제적 합리화 | 3(5.1) | 5(7.2) |
| 소수자/여성/복지 | 7(11.8) | 18(26.2) |
| 평화/통일 | 2(3.4) | 7(10.1) |
| 노동 | 27(45.8) | 10(14.5) |
| 전체 | 59(100) | 69(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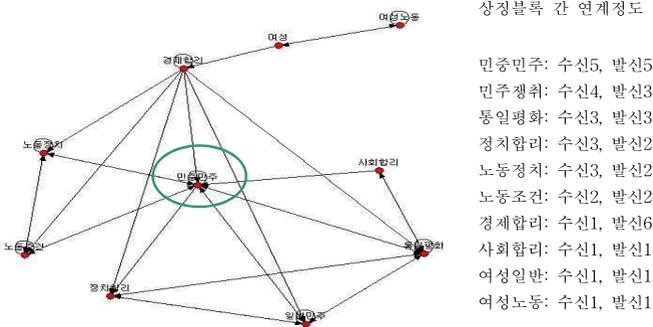
우선 사회개혁적 의제의 측면에서 1991년에는 민주주의 상징이 25% 이상의 비중을 갖는 반면, 2001년에는 4% 정도에 그친다. 정치적 합리화까지를 포함시켜도 1991년에는 민주주의 상징의 비중이 32%인 반면 2001년에는 18% 정도이다. 이것은 1991년을 정점으로 민주쟁취-민중민주를 전면에 내건 투쟁이 약화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즉 1991년에는 민중민주-민주쟁취의 주해석틀(master frame)이 존재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주해석틀이 소멸한다. 이것은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의제가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2001년에는 소수자/여성/복지 상징이 26%를 차지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대응을 반영한다 하겠다. 결국 1991년의 경우 민주쟁취-민중민주 주해석틀을 중심으로 노동이 사회적 의제의 형성에 참여하였다면 2001년에는 노동이 보다 다양한 내용의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주해석틀의 유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중앙수준에서 노동은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 관련 의제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문제가 조금 달라진다. 1991년 노동관련 의제는 45.8%로 가장 많은 데 비해, 2001년에는 노동관련 의제가 14.5%이다. 즉 1991년에는 시민사회운동 전체의 중요한 의제로 노동이슈가 부각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노동이슈가 주로 국가의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때는 조직노동자들만의 이해를 넘어선 노동계급의 집단적 이해, 혹은 그보다도 범위가 넓은 시민사회적 이슈의 한 부분을 노동이슈가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01년에 접어들면 노동이슈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적 이슈로서의 노동이슈의 성격은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1991년 상징의 구조적 등위성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를 보면 1991년 시민사회운동 조직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상징은 (민중)민주와 노동이다.

또 상징블록모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이 보다 뚜렷하다. [그림 3]에서 보이듯이 당시 '민중민주 상징'은 수신과 발신수가 가장 많으며 노동, 정치적합리화, 일반민주주의, 사회적 합리화 그리고 통일/평화 상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주해석틀로서의 민중민주 상징을 중심으로 여타 상징들이 수직적으로

(그림 3) 1991년 상징블록모델



에서는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천대한다면 우린 이곳에서 모두 함께 죽을 것입니다”라는 등 한 쪽의 짧은 유인물에서 ‘천대’라는 표현만 세 번 반복한다. 5월 3일자 「골리아에서 노동형제들에게!!」라는 메시지에서도 “진짜 노동자”, “멋진 노동자”, “아름다운 투사”, “골리아의 외로운 늑대대원”, “노동의 신성한 피로, 노동자의 붉은 피로 이 더러운 세상 씻어 버리고” 등의 한 서리고 정서적으로 격양된 표현이 반복된다. “한국 노동자들의 일상 경험을 표현하고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문화적 개념은 한(恨)”이라고 한다. 또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많은 노동투쟁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은 한은 외견상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인한 노동갈등을 격렬한 저항으로 확대하는 불씨가 되곤 했다”(구해근, 2002: 201~204). 그런 점에서 ‘한’으로 나타나는 여러 저항적 표현들은 단지 조직노동자들의 이해 표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으로 요약할 수 있는 표현들은 그것이 명확한 계급언어나 계급문화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뚜렷한 공공적이고 나아가 연대주의적 의사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아직 형성기의 징후이다.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를, 또 노동자가 사회의 다른 소수세력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급적 정체성의 확립과 연대주의적 의식의 확장이 적어도 지역 현장 차원의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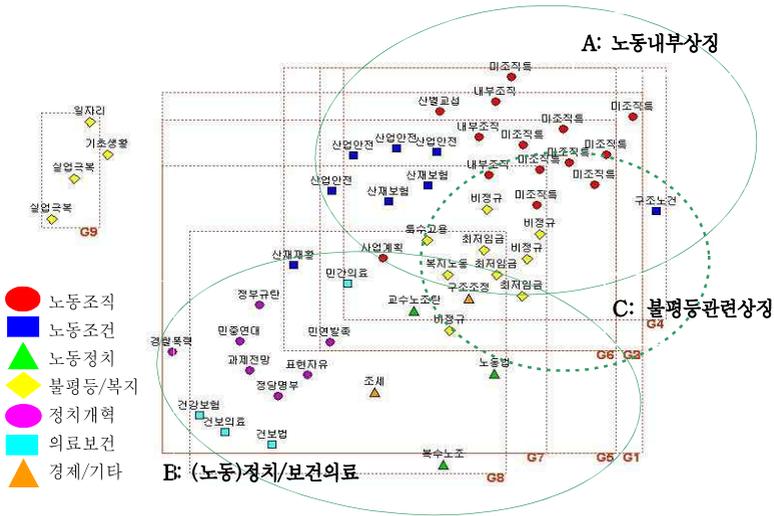
동자투쟁에서는 하나의 문화로까지 구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물론 이 메시지가 “6월 항쟁의 함성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함성의 그 날, 노동해방의 그 날에 살아 숨쉬기 위해 “민중이 주체적으로 떨쳐 일어나야 할 때”이며 “민중의 의지를 받들어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전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끝맺는다는 점에서 발전의 가능성은 보인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의 의제 형성의 내용 및 방식과 현장 수준에서의 그것이 다르긴 하지만 당시까지는 양자간의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2001년에는 중앙-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의 형성이 대의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 중앙의 상징연결망을 살펴보자.

2001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었던 시기이다. 즉 노동운동의 공공성 약화가 매우 강하게 거론되었던 해이다. 그런데 당시 민주노총 중앙의 상징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4]의 특징은 첫째, 노동상징이 정치 상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와 노동 관련 보건의료 상징이 하나의 하위그룹을 형성(B)하고 있는 것은 노동-정치 연계의 전형적 양상이다. 둘째, 불평등 관련 상징(C)이 단일한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 및 노동조건 관련 상징(A)과 노동정치 상징(B)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평등 관련 상징이 매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는 노동-정치-불평등이 연계되는 공공적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현장 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정규직 이해가 강조되면서 중앙-현장 간의 괴리가 매우 커진다. 이것은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괴리와 맞물리면서 노동운동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민주노총 사업보고에서 대표적인 비정규직 투쟁지원으로 거론되는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투쟁은 사실상 가장 전형적인 정규-비정규 갈등 사례이다. 정규직 노조의 가입 거부로 1999년 10월 13일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였던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2000년 회사측이 계약직 1만여 명 중 6천5백명에 대한 해고결정을 내리면서 독자적인 파업에 돌입하였다. 정규직 노조 역시 2000년 12월 정부의 민영화 발표로 파업에 돌입하지만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제외는 완강하게 거절한다. 이

(그림 4) 2001년 민주노총 상징 연결망



결과 비정규직 노조의 외로운 싸움이 지속되었다. 물론 이랜드 등 몇 개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이루어졌지만 그 비중이 매우 적고 예외적이다.

두 번째로, 2001년과 2002년 모두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 등이 사실상 ‘공공성’ 확보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에 그쳤다. 당시 한국중공업 노조의 성명서 「팔아라 팔아! 공기업은 다 팔아라」를 보자. 이 성명서에서는 민영화 문제를 “한국 중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체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발전설비 전문 제작용체로서 (중략) IMF의 한파가 몰아친 작년에도 450여억원이나 흑자를 낸 그야말로 알짜 공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은 매국노 (중략) 헐값에 넘겨주는 것 (중략) 한중 민영화 방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무시한 처사이고 대량실업만 부채질 (중략) 주권 포기”라고 한다. 결국 이 성명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오래된 경제발전 담론과 낮은 수준의 민족주의이다. 민영화를 통해 발생할 공기업의 공공적 성격의 약화와 이것이 노동자계급 및 사회적 약

자에게 발생할 부정적 효과 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등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경우 “반대와 저항으로 시종일관하는 듯 비치고 노동운동이 공공부문의 전망을 제기하는 주체로 부각되지 못”하였으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현재의 고용·임금·복지의 유지에만 집중하는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매몰되고 공공이나 여타 사회단체와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김태현, 2001). 더군다나 이들이 “기업별노조주의와 교섭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장 이기주의를 드러내었다. 이면계약이 성행하였으며, 이는 대중적 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조직적으로는 ‘조직의 폐쇄성’과 아울러 ‘소아병적 비밀주의’의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지적은 민주노총의 대의명분과 지역·업종·기업별 현장에서의 현실이 커다란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김태현, 2001). 최근 불거지는 노동조합 비리 문제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 주도한 비정규직 철폐운동 역시 그 성과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단협체결의 경우 2001년 민주노총 가입노조는 총 966개이며 이중 비정규직 관련 조항을 단협으로 체결한 노조는 61개로 전체의 6.3%이다. 또 2000년 미조직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시작된 5억원 모금운동은 2년간 목표액의 24%를 거두는 데에 그쳤다(2001년 사업보고). 이보다 훨씬 쉬운 2002년 비정규직 차별철폐 서명운동에 참여한 노조원도 전체의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04년에 접어들어 보건의료노조 및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산별교섭이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현장 간의 괴리가 극복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산별노조에 주요 대기업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서울대병원노조가 연대주의적인 규약 10장 2조5)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조건부 탈퇴선언을 한 후 결국 2005년 3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탈퇴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중앙 수준에서 형성된 공공적 의제가 지역·업종·현장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1991년과 2001년 연결망 분석 및 지난 10여 년간 노동운동의 담론 분석을 통해 형성된 의제의 성격 및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전국적 차원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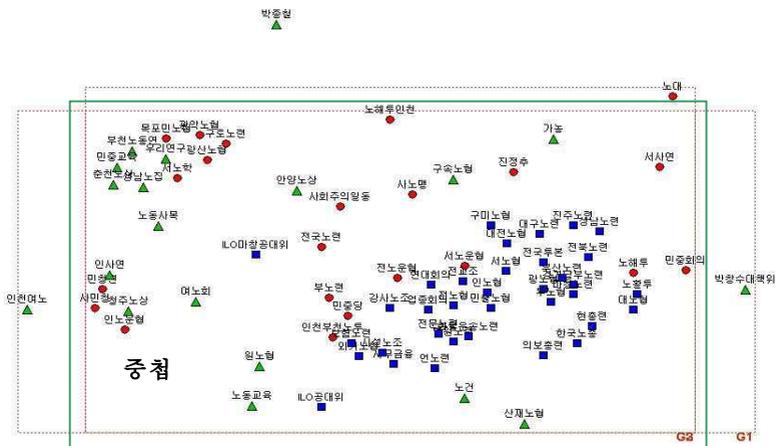
5) 산별협약은 최소 기준을 정하는 협약이므로 일부 사항에 대해 지부 협약보다 우선 효력을 갖는다는 합의안.

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의제가 계속 형성·유지되나 현장 수준에서는 조직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제가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성의 가정에 비추어보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조건이 악화되어 온 것이다. 또 공공성이 일종의 대의명분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그러나 전국적(중앙) 차원에서 여전히 공공적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여전히 주목되어야 한다.

2. 통합성의 현저한 약화: 노동운동의 파당 형성

다음으로 노동 내부와 노동 외부의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관계에서 통합성의 강화 혹은 약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1년과 2001년의 연결망을 비교하였다. 1991년 노동조합 및 여타 노동조직들 간의 상호관계는 [그림 5]와 같다. n-clique(n=5)분석을 한 결과 노동조직들은 두 개의 그룹(G1, G2)로 나뉘어 지긴 하나 조직의 90% 이상이 중첩된다는 점에서 조직들간의 관계맺기가 매우 통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1991년 노동 내부 연결망



주: * 이 그림은 참여조직 상호 강하게 혹은 약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조직 대다수를 포괄하는 방식의 파당분석(n-clique)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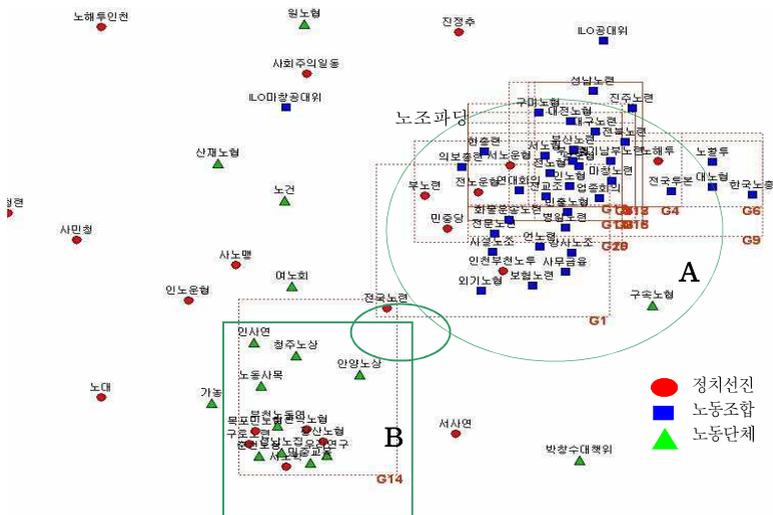
● 정치선진
 ■ 노동조합
 ▲ 노동단체

다음으로 위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강한 연계만을 추출하여 clique 분석을 한 것이 [그림 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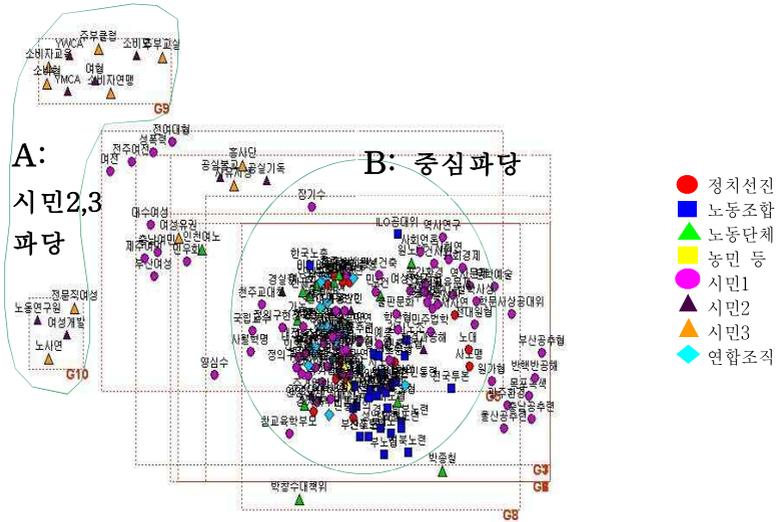
강한 연계만을 추출할 경우 연결망 내부가 20개의 하위그룹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그룹간 중첩 정도는 상당히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두 개의 파당으로 나뉜다. ‘정치선진조직+노동조합’ 중심(A) 파당과 ‘정치선진조직+노동단체’ 중심(B) 파당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파당은 강한 연계에서만 나타나고 정치선진조직에 의해 노동단체와 노동조합들이 매개된다는 점에서 1991년 노동 내부는 대체적으로 통합적인 경향이 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즉 노동조합 중심 파당에 정치선진조직들이 결합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노협에 소속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노조협의회와, 전노협과 별도로 결성된 업종노련이 긴밀한 관계맺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노동 내부의 통합성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1991년의 노동 외부 관계를 살펴본 것이 [그림 7]이다. n-clique (n=9)에 의거하여 분석한 위의 그림을 보면 1991년 노동 외부(노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의 관계구조가 매우 통합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1991년 노동 내부 파당(강한 연계만을 추출)



(그림 7) 1991년 노동의 사회적 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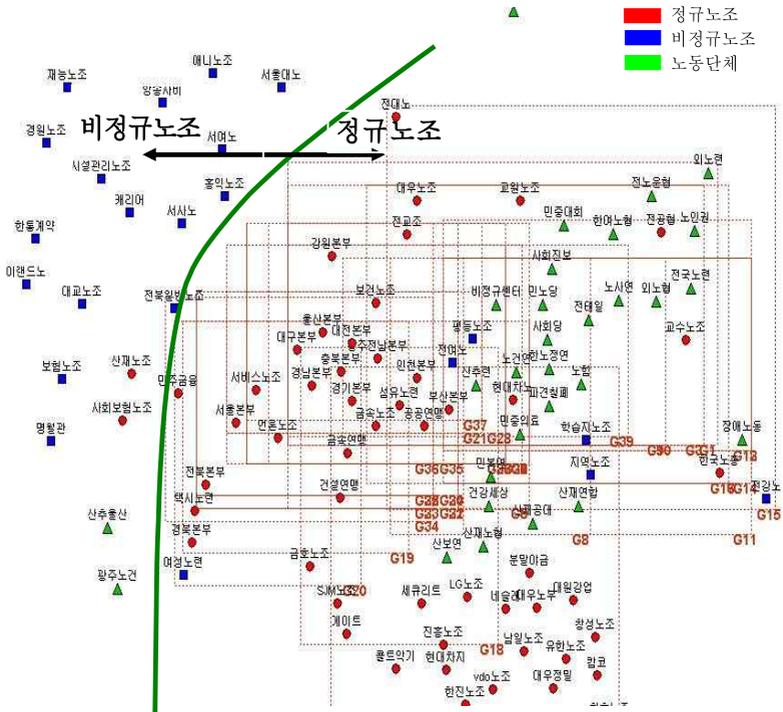


더불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보수적인 시민조직 2, 3은 고립적이다(A). 이들은 내부적으로도 강한 결속을 형성하지 못하며 또한 사회적 연결망 전체에서 보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연결망 전체의 통합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수적인 시민조직과 연계가 약하다는 것이 노동운동의 연대주의적 특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의 사회적 연결망이 가지는 통합성은 강한 결속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그룹(B)의 존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이 그룹은 정치선진, 노동조합, 노동단체, 농민 등 기타계급 그리고 시민1과 연합조직(통일전선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첩의 정도가 매우 높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여성 조직들과 지역환경 조직들 역시 이들 조직과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이것은 노동의 연대주의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여성조직들이 연결망의 주변을 점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환경조직들이 전체 연결망의 주변을 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중앙조직이기보다는 지역조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조직들은 전국조직조차도 주

변적이다⁶⁾. 결론적으로 1991년은 노동 내부와 노동 외부 모두 매우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다. 이것을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의 형성과 연관시켜 본다면 1991년의 연결망 분석 결과는 노동의 공공성과 통합성이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연대주의적 특징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1년에도 관계에서의 이와 같은 통합성이 유지되는가?

[그림 8]은 2001년 민주노총 내부 연결망이다.⁷⁾ 이 연결망은 1991년과 비교하여 뚜렷한 파당을 형성한다.

(그림 8) 2001년 민주노총 내부 연결망



6) 이 문제는 이 글의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
 7) [그림 8]은 민주노총의 자기중심적 연결망 자료 중 노동 내부 조직에만 한정하여 연결중심성이 1인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이분화한 후 clique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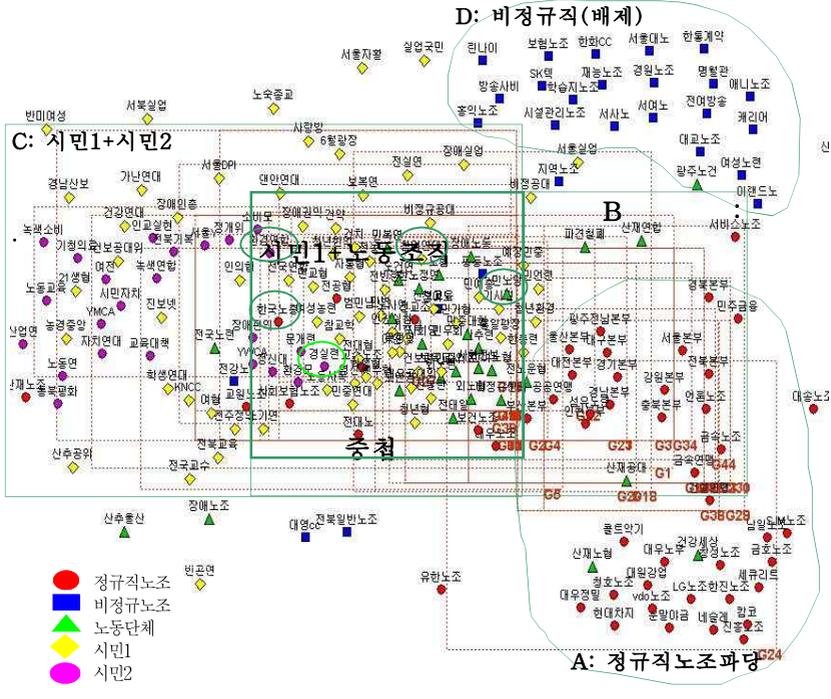
첫째, 비정규직노조들의 경우, 정규직 노조그룹에서 철저히 배제될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도 강한 결속을 형성하지 않는다. 매우 고립분산적인 것이다.⁸⁾ 비정규노조 중 정규직노조 혹은 노동단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전국대학강사노조(전강노)나 전국여성노조연맹(여성노련) 그리고 학습지노조 등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처음부터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었던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정규직 노조와 노동단체들은 39개의 clique을 형성하면서 강하게 중첩되어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격렬하게 폭발된 비정규-정규 간의 갈등이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그림 8]의 오른쪽, 즉 정규직노조와 노동단체들의 파당 중에서도 현장의 정규직노조들은 노동단체 그룹들과의 중첩이 약하다. 노동단체와 중첩을 형성하는 그룹은 정규직 중 주로 지역·업종노조이다. 따라서 중앙->지역·업종->현장으로 갈수록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노동단체와의 연계가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접어들면 정규직노조 중심의 고립성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셋째, 현장의 정규직노조와 중첩을 형성하는 노동단체들의 대부분이 산재추방공대위와 건강세상 등 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연관되어 협력한 산재의료단체들이다. 따라서 이들 노동단체들과의 연계는 오히려 정규직의 폐쇄적 결속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특징은 민주노총의 노동 내부와 외부를 통합시킨 연결망(그림 9)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40여 개의 clique이 형성되는 이 분석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정규직의 배제(D)와 정규직 중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하위그룹(A)의 형성이다. 첫째, 통합연결망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노조,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으로부터도 배제된다.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배제는 단지 노동운동의 문제만이 아니며 중심적 시민운동조직 역시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달리 2000년대 비정규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다.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관계 및 상징의 양상을 분석하는

8) 1980년대까지 노동운동조직들이 고립분산적이었던 것을 보면 이와 같은 특징은 생성적 단계의 양상일 가능성도 있다.

(그림 9) 2001년 민주노총 통합연결망



것은 비정규직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지역 혹은 업종노조와 노동단체 그리고 시민1조직이 연합한 하위그룹 B와 시민1조직과 시민2조직 중심 하위그룹(C) 간의 중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결속이 비록 약화되긴 했지만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중첩을 형성하는 ‘시민1+노동조직’ 간의 파당이 그것이다. 이것은 노동 내부 정규직 중심의 고립적 파당의 효과가 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제어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공공적 사회적 의제 형성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1991년에 비해 2001년은 두 가지 차원의 피리가 뚜렷하게 보인다. 하나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적 사회적 의제에서 나타나는 중앙과 현장 간의 피리이다.

또 다른 하나는 통합성에 있어서 정규직노조 중심의 고립적 파당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즉 중앙 차원에서는 상징 수준에서의 공공성이 드러나지만 관계 맺기에서는 중앙 차원의 자료에서조차 정규직의 고립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공공적인 사회적 의제가 중앙 수준에서는 형성되지만 현장 수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에서는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2001년 노동연결망의 뚜렷한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행위와 상징도 괴리되고 있다 할 것이다.

관계맺기에서의 통합성 약화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의 대응을 통해 더욱 고착되었다고 보인다. IMF 경제위기를 맞이한 민주노총의 대응은 '고용안정'이었다. 1997년 9월 27일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9일에는 「고용안정특별법」, 「임금채권보장에관한법률」 등 6개 법안에 대한 제·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또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임금삭감 없이 노동단축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 국민항쟁’을 선포”했다(<노동과 세계>, 호외 1호). 물론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민주노총의 15대 공약 요구에는 고용안정 외에도 경제민주화, 사회보험제도 개선, 교육개혁·행정개혁 관련 내용들이 총망라되었다는 점에서 고용안정 요구가 곧바로 정규직 중심의 이해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는 확산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우려가 확인된다. 하지만 1998년에 접어들면서는 모든 활동이 정규직 ‘고용안정’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1998년 2월 6일 잠정 합의된 노사정위원회의 협약안이 민주노총 대의원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배석법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지도부가 전면사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바뀐 것도 상당부분 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대의원대회에서의 폭력사태로까지 비화된 정리해고 잠정합의에 대한 분노는 전교조 합법화, 실업 및 고용대책,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가, 노동시간 단축 위원회의 구성 합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이 자리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 판례가 폭넓게 해석되어 1997년 10월 이미 40만 노동자가 정리해고제 도입 이전에 해고된 상황에 관해서는 눈을 감았다. 정리해고에 대한 무조건 반대보다는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또한 이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의견도 검토되기 어려웠다.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은 첫째, 현장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복무하고 둘째, 노동자의 계급적 시각을 관철 내지 고수하는 것”이라는 주장(<노동과 세계>, 제23호)이 정규직 이해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1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를 비판하고 등장한 2기 집행부는 선거에서 “민주노총의 위기는 상층부의 위기일 뿐입니다. 계급적 자주성과 절차적 민주성의 훼손, 관료화된 상층부와 조합원과의 괴리가 위기의 본질이고 그것을 관료적으로 봉합하고 무마하려는 상층부의 무리한 시도들이 위기를 확대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돌려받을 조합원 대중들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주력한다는 사실은 한동안 언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노조는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함께 했던 식당 여성조합원들의 해고를 양보교섭 대상으로 내놓았다. 1999년 3월 결성된 한라중공업 사내 하청노조 위원장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 정규직 고용안정의 희생물이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한다(<노동과 세계>, 제60호).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거의 90% 가까운 나머지 미조직 혹은 비정규 노동자를 지원하는 행위는커녕 그와 유사한 의견조차 제기되지 않았다. 때문에 고용안정을 내건 정규직의 1998년 총파업은 노동자들 전체의 지지조차 받기 어려웠다. 물론 파업이 철회된 후 “5말6초 투쟁을 고용안정에만 맞춰 고용불안이 피부로 와 닿지 않거나 휩쓸고 지나간 곳은 투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총체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갖고 노동자가 투쟁을 통해 바꿔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간부의 발언은 주목되어야 한다(<노동과 세계>, 제30호). 왜냐하면 사실상 이 때를 전후하여 민주노총 중앙은 사회보장 및 사회개혁을 전면에 제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을 위한 고용안정에 매달렸다. 이것은 민주노총을 정규직, 남성, 대기업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으로 고착시킬 매우 위험한 경험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지도부의 잘못된 정규직 현장 대중과 너무 떨어져 있으며 민주적 의사소통이 부재하였던 것에 있다기보다는 정규직 노조들이 정규직 중심의 결속을 강화하는 반복적인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적 내용과 지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반복적 투쟁 경험은 노동 내부의 구조적 분절로 곧바로 외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합성의 측면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가능성은 축소되어 왔다. 특히 정규직 중심의 고립적 파당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 내부뿐만 아니라 노동 외부 연결망에서도 비정규직의 배제가 확인된다. 하지만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긴밀한 관계가 비록 약화된 것이라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은 통합성 해체를 완화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V. 결 론

공공성과 통합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주의적 발전 가능성 혹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의 재형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하나는 전국적(중앙) 수준에서의 공공적 사회적 의제가 여전히 형성·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대의명분으로 전락한다 하더라도 현장 수준에서의 조직 노동자 중심의 강력한 이해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차원에서는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다른 하나는 노동 내부와는 달리 노동 내부에서는 여전히 통합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여전히 시민운동조직과의 상대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자원동원을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특징은 현저히 약화되어 있지만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보다 강력한 개혁적 리더십의 구성 여부이다. 현재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의 리더십은 상당 부분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이며 중앙 수준에서는 조절적 리더십과 개혁적 리더십이 결합되어 있고, 현장 수준에서는 독점적 리더십이 보다 강하다(Burns, 1979)⁹). 거래적 리더십은 노동운동이 제도화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라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조건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내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혁신적 리더십 특히 개혁적 리더십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힘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지도력을 일정 정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 또 민주노총 상층간부들의 1980년대 경험, 그리고 국가의 배제적 노동정책의 부분적 전환 등 리더십의 재구성에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둘째, 비정규직 등 노동인구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산별로의 전환과 조직화의 강화 여부이다. 2000년대 접어들어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던 산별 전환은 두 가지 장애에 부딪혀 있다고 보인다. 하나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불참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측의 부정적 태도이다. 게다가 조직을 하락 역시 매우 중대한 도전이다. 이 결과 산별 전환이 중소기업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부가 공공성과 통합성의 확보를 통한 연대주의적 전통의 복원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다. 약화된 것은 하지만 한국 노동운동은 초기부터 여타 사회운동의 자원을 동원하여 왔다. 이 전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연대 등 상대적으로 친노동적 조직들과의 협력은 정규직 이기주의의 부정적 효과가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물론 시민운동과의 결속은 노동계급 이해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친노동적인 조직들로 그 범위를 좁힐 경우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진입은 민주노총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노

- 9) 거래적 리더십은 서구 선진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공동 목적의 성취보다는 수단적 가치에 충실하면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개인 및 집단과의 합리적 거래를 통해 집단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 하위 범주로서 조절적 리더십과 독점적 리더십이 있는데 특히 후자는 정규직 이기주의와 같은 유형을 의미한다. 이와 구분되는 것이 혁신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다. 혁신적 리더십의 하위 범주에는 혁명적 리더십과 개혁적 리더십이 있다.

동운동의 리더십 재편과 산별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노총 및 시민운동과의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조직노동의 이해에 보다 충실할 수 없는 민주노총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보다 유리할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 노동운동의 성격 특히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의 발전 가능성 및 그 방법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적 조합주의 혹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의미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노동운동이 1980년대 이미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사회운동적 특성의 합리적 핵심들을 되살려 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 김동춘. 『한국사회 노동자연구-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5).
- _____.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의 재정립」. 『비정규노동』 8호 (2002) pp. 160~165.
- 김종엽. 「80년대 통일논의에 대한 언술분석의 한 시도-배위의 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주희 엮.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 (2001).
- 박태주. 「비정규직 노동자-잇혀진 존재에서 중심의 한 축으로」. 『노동사회』 54. (2001).
- 송호근.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1991)
- 송호근·김우식·이재열 편저. 『한국사회의 연결망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오건호. 「신자유주의시대 사회공공성 투쟁의 성격과 의의」. 『산업노동연구』 10권 1호 (2004) pp.95~115.

- 은수미,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연구-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진우·박일우·김종환, 「담론이란 무엇인가-담론개념에 관한 학제간 연구」, 『철학연구』 56, (1996).
- 임현진·김병국, 1991,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국가·자본·노동관계의 한국적 현실」, 『계간 사상』 (1991년 겨울) pp.109-168.
- Burns, James. M.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국역: 한국리더십연구회 옮김. 2000. 『리더십 강의』. 생각의나무).
- Eimer, Stuart. "From 'Business Unionism' to 'Social Movement Unionism': The Case of the AFL-CIO Milwaukee County Labor Council". *Labor Studies Journal* 24 (2) (Summer 1999).
- Macdonell, Diane. 임성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출판. (1992).
- Moody, Kim. *Workers in a Lean World: Union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Verso (국역: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옮김. 1999.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 Naidoo, Ravi. "Social-Movement Unionism in South Africa: a Strategy for Working-class Solidarity". Issue 237. (Sep/Oct 2001)
- Przeworski, A. "Social Democracy as a Historical Phenomenon". in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hp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7-46(국역: 한상진 편저.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문화연구소 1991).
- Woody, Geoffrey. "Unionism and the Possibilities for Perpetuating a Social Movement Role: Representivity, Politics, and the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Labor Studies Journal* 26 (4). (winter 2002).

abstract

The Possibility of Social Movement Unionism in Korean Labor Movement

Eun, Soo-Mi

This paper defines preconditions of social movement unionism as following: ensuring the public and raising the solidarity. And i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rogress to social movement unionism in Korea labor movement. Because this will provide the cue to overcome the crisis of Korean Labor Movement.

Next, core methodological tool of this paper is network analysis. Especially it comparison between 1991 and 2001, and fill up the limit of network analysis with discourse analysis. The analysis use various literatures materials from 1990 to now.

Outcomes of my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ovement unionism is disappear, there are the public social agendas left partially in macro level. Second, the networking between labor movement and civic movement ease the ego-centricism of regular workers. This mean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social movement unionism. But For realization of social movement unionism, it needs three conditions: first, the transition transactional leadership to transformational one. second, powerful switchover an enterprise union to an industrial union. third, the change of relational structure between the labor movement and the civic movement.

Keywords: social movement unionism, the public, solidarity, network analysis.